

대구·경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 발언 전문

▶ 인사말

대구·경북지역의 혁신협의회 여러분 반갑다. 오늘 여러분 지역에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한다.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저와 참모들에게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늘 한 가지 더 유의해서 토론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은 이 토론이 진행되는 성격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지역사회에 선물을 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지역 스스로 주도해 나가고 중앙정부는 지역이 결정한 전략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해가고 있다. 여러 가지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의 역할, 지역의 발전성이 아주 중요한 변화다.

지금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핵심은 지역혁신체계이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역혁신협의회다.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혁신이고 중앙정부는 그것을 지원하기위해 보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지역에 가면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해 말씀을 많이 한다. 특별히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고 공감하는 부분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과 스스로의 노력이다. 지금까지 인프라 도로항만 등 여러 시설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었고 중앙정부가 많은 역할을 했다.

대체로 2006년이나 2007년에 가면 사회간접자본 축적도가 선진국 수준에 간다고 한다. 그리고 경험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이 발전의 핵심요소가 아니라 21세기에는 사람이 발전요소다. 사람이 어떻게 협력체제를 갖추고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얼마나 자율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역량을 잘 조직하느냐 하는 것이 성패를 결정한다고 한다. 오늘 이와 같은 새로운 흐름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고자 토론에 참여해서 함께 하고자 한다.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의 첫 번째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이 들어 있다. 그와 더불어 경제적 토대로서 시장개혁, 사회적 범위로서 사회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포괄전략으로 지방화와 동북아중심전략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만큼 지방화전략은 새로운 시대의 국가성장전략이다. 이를 성공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지방 스스로 좋은 기회가 돼야 하고 국가적 발전의 틀이 마련되는 되는 중요한 일이다. 그 일을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함께 공유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리다. 여러분의 활동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

▶마무리 말씀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썼다. 시간 때문에 제약을 받고, 각박하게 진행됐지만 그러나 토론이 압축돼서 매우 효율적인 토론을 한 것으로 느낀다.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혁신발전 5개년계획은 매우 알찬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면 상당 부분 성공하고, 어떤 것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하고 어떤 것은 약간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매우 유익한 토론을 했다고 생각한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010년 1만1800불 목표를 세웠는데 너무 작다. 조금 올리자.

그리고 대구·경북이 따로 가야 하는가, 함께 가야 하는가가 고민거리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큰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경북에서 별어서 대구에서 쓰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지역총생산은 경북이 좀 높고 대구시가 빈약하지만 실제로 개인소득을 비교하면 대구가 우위에 있을지 모른다. 지역이 나뉘 있어서 정책에서 단절돼 있는데 협력의 정도를 높여 나가면 분리된 약점을 극복하지 않을까를 토론중에 발견할 수 있었다.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상설 전문조직의 신설을 지원하는 문제는 지역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때 활동에 탄력이 붙고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 돈은 있다. 잘되기 위해서는 지역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좋은 성과가 나오면 정부는 돈을 주겠다.

환동해권 시대를 내다보는 것에는 인프라를 얘기했다. 인프라가 산업을 따라 가는 경우도 있고 인프라에 따라 경제가 오는 경우도 있다. 적극 배려할 생각이다. 해마다 몇 천억씩 돈을 넣어야 된다면 정부로서도 부담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풀어나가자. 너무 앞서가면 비용은 늘었는데 도로가 텅 빈다든지, 기차가 텅 빈다든지,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한다. 문화분야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요컨대 중앙정부는 균형발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갖고 있다. 대구·경북은 지역발전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 지역전략의 핵심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자율혁신, 자력발전의 전략이다. 중앙정부가 열심히 도와야 하겠지만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나서도 성공할 수 없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엔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열심히 밀겠다. 지역의 성공 여부는 지역혁신체계를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 70년대 중화학공업은 입지가 중요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대구시에 철강공장, 자동차공장, 화학공장을 지을 수는 없다. 앞으로는 지식산업시대다. 대구든 안동이든 구미든 할 수 있다. 여건이 아니라 주체적 역량이 핵심이다.

대통령이 포항에 왜 왔겠나. 포항은 될만한 것이 쌓여있다. 주체적 역량이 다. 그것을 대학과 연구소, 언론과 사회가 일체로 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오늘 위원장과 장관이 마치 선물이라도 줄 것처럼 말씀하는데 장관들한테 약속받을 필요 없다. 포괄적 전략으로서 지역의 전략, 이것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포괄전략에 속하는 여러 사업은 여러 부처에 쪼개져 있다. 이것들이 다 모여서 전략이 된다. 그리고 될 것 같아야 채택한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계획경쟁에서부터 앞서가야 한다. 누리사업이나 나노집적지역 등에서 아주 우수한 계획을 가지고 아주 유망한 종목을 손에 쥐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참 좋은 일이다. 모범적인 일이다. 그러나 내용이 비슷비슷할 때는 모든 것이 지방이다. 기술혁신 우선, 인력양성 우선 등의 원칙을 가지고 적용해 간다는 것을 슬그머니 가르쳐 드리겠다. 다른 지역에 가서는 절대 안 가르쳐 줄 것이다.(웃음) 반드시 심사해야 하므로

계획은 치밀하게 해 달라. 1년 뒤 평가할 것이다. 채택됐더라도 1년 뒤 평가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성공사례가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때는 다른 자원을 집중해서 지원해 드리겠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돈이 좀 남아돌 것이다. 모든 사업에서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정치적 사업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다. 남는 돈으로 투자하겠다.

물론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은 고려한다. 어제 70개 낙후지역 사업은 따로 계획하고 개별사업은 낙후지역에 배려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아껴서 되는 쪽에 돈을 지원하겠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는지 중앙정부가 돈을 만드는 게 빠른지 한 번 경쟁 해보자.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가 돈을 만드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그렇게 갈 것이다. 적극적으로 사고해 달라. 지금까지 서해안지역을 쳐다보고 왜 그렇게 돈이 많이 가느냐고 하고 서해안은 동해쪽을 쳐다보는데, 또 수도권이다 잘 살더라 하는데, 그렇다고 수도권에 돈을 안 준다고 다 잘 사느냐. 그렇지 않다.

수도권은 자기발전의 길을 가고 지방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 살길을 찾아 달라. 창의적 대안으로 경쟁해 달라.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지만 반드시 지지만은 없을 것이다. 왕년에 잘되던 도시가 점차 사양화되고 옛날에 희망이 없던 도시가 잘 살지 않느냐. 전 세계 도시는 흥망성쇠를 반복한다. 이제 남의 동네 쳐다보지 말고 이제 수도권도 잊어버리자.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관리할 테니, 잊어버리고 우리 지역의 창의적 발전전략을 내놓는 방향으로 해 달라.

대구·경북의 안목도 중요하지만 신행정수도가 연기군 일대에 만들어진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나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 대구·경북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 달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억지로 편성하는 그런 시대다. 사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

건설업이 현재 우리 경제의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리막으로 가고 있다. 이 건설의 결과는 축적된 국가의 자산이지 않느냐. 철도, 도로, 큰 건물, 빌딩, 아파트, 이것이 국가적 자산이다. 건설산업이 경기를 유지해 가야 그것이 경기를 활성화 하는 것이고 국부가 축적되는 것인데, 우리 경제의 성장수준만한 건설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가야 할지 정말 골머리 아프다.

그래서 (야당주장대로) 100조가 들더라도 10년간 계속 되더라도 연간 7~8% 성장시장 밖에는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공식적으로 45조라고 하는데 사업을 왜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쳐다보냐. 되는 쪽으로 건설시장을 열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해야 한다. 어차피 충청도에 짓지 않으면 서울 근교에 지어야 한다. 어디에 지을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다.

교통과 인프라망도 바뀐다. 경북은 대단히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되는 것 아니냐. 새로운 교통망이 설치되면서 예전의 오지가 수도권이 될 수 있다. 큰 창으로 보고 넓게 봐야 한다. 이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대구·경북의 전략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서비스, 지역기반 서비스가 포함돼 있는데 생활복지 서비스는, 우리가 경제성장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삶의 복지가 아니겠느냐. 생활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안목과 눈을 넓히면 고용이 확대되고 성장의 열매가 시민들에게 분배된다고 생각한다. 대구·경북의 무한한 발전을 빌겠다.